

주간 변화와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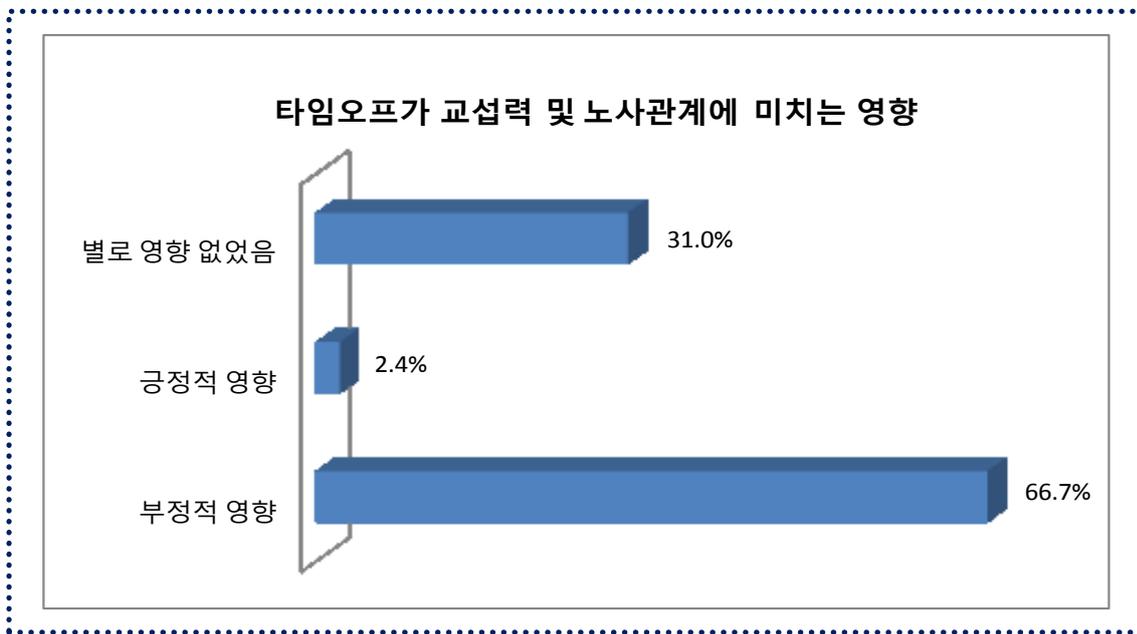
홈페이지: kttu.or.kr

트위터: twitter.com/kttu_kr

하
이
슈
-
타
임
오
프
-
실
태
조
사
결
과

타임오프 3년, 현장 노조활동 위축

한국노총 "타임오프 폐지,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노조법 개정" 촉구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을 맞은 가운데, 타임오프제도에 따른 현장 사업장 노조활동 위축과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3~4월 소속 306개 사업장 노조(지부,지회,분회)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변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양 노총은 지난 6일, 국회가 타임오프제도 폐지와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타임오프 제도에 따라 유급 풀타임 전임자 규모 크게 줄어"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전 3.8명이었던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는 제도도입 이후 2.5명으로 34.2% 감소했다. 반면 파트타임 노조전임자의 숫자는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30%

가량 늘었다. 한국노총 등은 이를 파트타임 전임자가 대체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현장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것'이란 노동계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했다. **KT노동조합도 30% 가량 전임자를 줄인 바 있다.**

“교대제 및 지역분포 사업장 피해 더 심각”

응답자들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이후 노조활동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안'을 묻는 문항에 대해 ▲사업장별 전임간부 확보(41.4%) ▲(사업장별 전임간부 확보 어려움에 따른) 비전임 간부를 통한 조직관리 ▲사업장별 현안문제 해결을 애로사항으로 답했다.

또 교대제를 시행하는 사업장 중 교대제에 따른 타임오프 추가한도 부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82.9%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추가한도부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대근무 시간에 따른 노조운영 및 조직관리'가 가장 높은 응답률(1순위 78.7%)을 나타냈다.

“타임오프제도 시행으로 노조활동축소 우려 사실로”

대부분의 노조가 타임오프제도 도입 이후 노조운영비와 적립금, 사업비 지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급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60.4%(55개)의 노조가 무급전임자 임금확보를 위해 노조활동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노동부 지침에 의한 '타임오프 대상 업무 제한'에 따라 '상급단체 활동 참여(41.7%)' '조합원 조직사업(24.2%)', '연대활동(14.4%)' 등의 노조활동이 제약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급 노조전임자 급여 총당 방법

	응답 수	백분율
조합비에서 부담	55	26.7
노조 재정 및 수익사업 기금에서 부담	7	3.4
사내복지기금 등 노사공동기구에서 부담	1	0.5
기타	14	6.8
무급 전임자 없음	129	62.6

무급 노조전임자를 두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급여 총당 방식을 조사한 결과, 조합비에서 부담한다는 비율이 26.7%(무급전임자가 없음을 제외한 응답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무급노조전임자급여 노조총당으로 인한 노조활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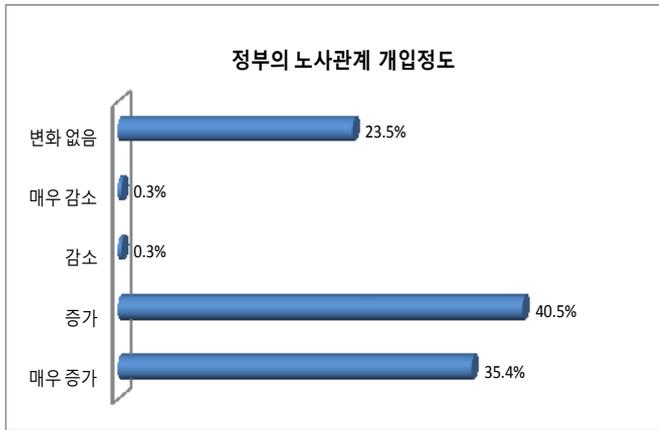
	응답 수	백분율
노동조합 활동 축소.재조정	55	60.4
여가활동 지원 등 조합원 복지 서비스 축소	5	5.5
근무시간외 조합업무 확대	5	5.5
노동조합 조직재편	1	1.1
비전임 조합간부 확대	5	5.5
비전임 조합간부 축소	5	5.5
기타	15	16.5

무급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노조가 자체 총당함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60.4%가 이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축소, 재조정되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여가활동 지원 등 조합원 복지 서비스 축소, 비전임 조합간부 확대, 근무시간외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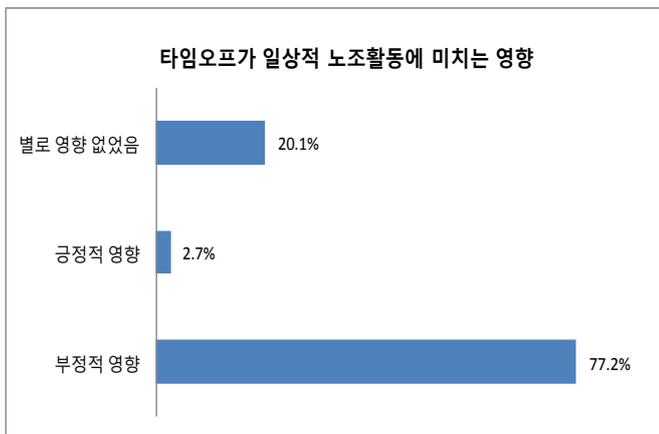
업무 확대 등의 변화가 있게 된 것으로 답변했다. 이에 따라 무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체 재정충당으로 전반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시행 발미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심각”

타임오프 시행을 전후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5.9%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매우 증가했거나 증가했다고 답했다.



“일상적 노조활동에 부정적 영향 미쳐”



‘타임오프가 일상적 노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7.2%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고 평가했으며, ‘타임오프가 노조의 교섭력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66.7%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이는 타임오프가 노동계의 우려와 같이 노조활동 및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불러와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이달말부터 타임오프 한도 재심의

양대노총이 타임오프제도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달 말부터 재개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면위는 4월 16일부터 전국 65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노, 사, 공익위원들의 논의가 구체화된다.

이번 논의는 ‘3년마다 타임오프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다.

“장기적으로 노사자율 결정권 보장해야”

KT노동조합은 타임오프제도 시행에 맞춰 전임자를 30% 축소하는 등 노조법을 존중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임오프제가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노사간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정부에 전임자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